

미국 에너지 위기는 “오바마 탓?”

전 하원의장, 정책오류 비판 ... 유전개발 확대에 에너지세 감축 주장

뉴트 깡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미국의 유전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깡그리치 전 의장은 4월8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를 통해 “미국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 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고용을 늘려야 하며 에너지세 인상을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에너지 자립 정책을 표방해왔지만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그 누구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온실가스 총량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너지세 부담을 늘리고 휘발유 가격을 올려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유전 개발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위해 콜로라도주와 유타주, 태평양 연안 등지에 매장돼 있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적대국에게까지 거액을 지불하면서 석유를 수입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위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정 또는 대체 에너지 창출에 나서야 하며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잘못에 의해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9>